

63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김 현 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산업혁명 이후 인간은 태양에서 온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석탄과 석유를 손쉽게 태울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는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과 영토의 확장을 가져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파괴와 식민화 그리고 불평등의 증가를 초래했고, 급기야 우리는 '기후위기'라 불리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삶과 생태계에 양과 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비할 바 없이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에너지 정책은 주로 소수 전문가와 관료의 손에만 맡겨져 왔던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은 제한된 지리적 조건 속에 에너지 다소비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에너지 정책의 방향은 시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공식 제도 정치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핵발전 정책에 대한 논쟁, 그리고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정책을 둘러싸고 에너지 문제가 어떻게 정치 영역에서 소화되고 에너지 민주주의로 연결된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아래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의 쟁점들을 살펴본다.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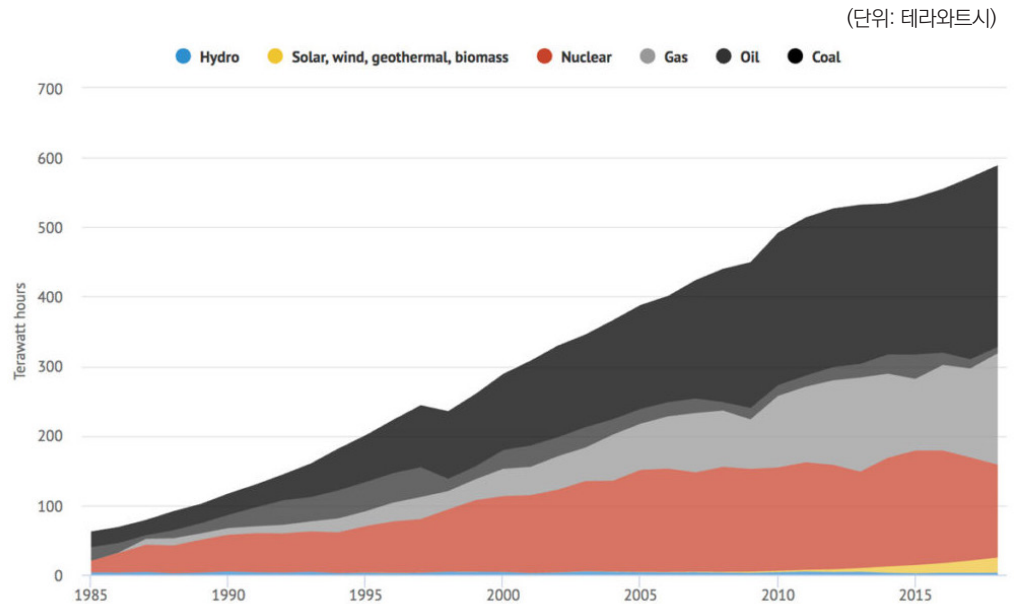
## 한국의 에너지 구조와 에너지 전환 정책

한국은 수출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을 이루어왔고, 이를 위해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초가 되어 왔다. 그래서 과거 정부들은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증설해 왔고,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 구조도 유지되었다. 하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상대적으로 높은 핵발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도 변화를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었다.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포함시켰고 에너지원 구성에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핵’을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선언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가급적 빨리 폐쇄하며,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나아가서, 문재인 정부는 2015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중요한 국제적 약속인 파리협정과 2019년의 세계적 기후파업의 메시지를 일정하게 수용했고, 이에 따라 탈핵과 탈석탄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을 제시했고, 이어 ‘2050년 탄소중립’도 약속했다.

핵발전은 안전성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에너지 전환에서 중심적인 문제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전력 생산량 중 30% 정도가 핵발전에서 나온다. 전력 부문의 경우 거의 모든 저탄소 전력이 핵발전에서 나오며 태양광, 풍력 및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의 기여는 아직 7%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핵에너지를 배제한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더욱 급격한 확대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한국의 연료별 전력 생산, 1985-2018



출처: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9. Highcharts를 사용한 Carbon Brief의 차트.  
<https://www.carbonbrief.org/the-carbon-brief-profile-south-korea>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2017년 당시 30% 정도 공정을 보이던 울산의 신고리 5, 6호기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내리면서 대략적인 방향이 만들어졌다.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구성한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①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재개와 ②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 ③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건설재개에 따른 보완조치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후속 조치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신고리 5, 6호기 외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하고 노후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며, 현재 7%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에 20%로 확대하며, 지역 산업의 타격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 등이 그 내용이다.

〈참고〉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론조사 주요 결과 (2017년 10월 20일)

- 신고리 5, 6호기 건설 : 재개 59.5%, 중단 40.5%
- 원자력발전 정책방향 : 원전축소 53.2%, 원전유지 35.5%, 원전확대 9.7%

---

하지만 이 공론화는 사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완공에 가까운 단계인 신한울 1, 2호기의 건설 중단과 재검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은 이미 투입된 건설 비용이 아깝다는 논리에 압박을 받아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까지는 허용해주는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게다가 이러한 로드맵에 따르더라도, 신고리 5, 6호기가 완공되어 설계 수명대로 가동되면 핵발전은 20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매우 느리고 지연된’ 탈핵이 예상된다.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도 핵발전은 전력 생산에서 2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리고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은 반대 세력이 퍼트리는데 ‘가짜뉴스’와 지역 주민의 수용성 부족으로 인해 성공을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정책은 정치적 보수와 진보(현 정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진영 사이에서 과도한 정쟁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탈핵을 뒷받침할 실효 있는 에너지 믹스나 세부 정책 개발은 담보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약한 정책적 대응과 낮은 대중적 인식을 극복하고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같은 전국 연대 조직을 결성하여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다.

## 02

## 한국판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

한국도 2020년 초부터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경험했고, 정부는 이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존에 추진하던 ‘디지털 뉴딜’에 ‘그린뉴딜’을 더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발표되었는데, 이중 그린뉴딜 예산은 73조원이다. 그린뉴딜의 핵심 사업은 그린 모빌리티 확대(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지원), 녹색산업 혁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등이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 정부는 국제 사회와 발맞추어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동참을 선언했다. 2020년 10월 28일 문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그해 말 국무회의에서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확정했다. 아울러 2021년 내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도 상향하여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sup>1)</sup>

하지만 이러한 선언과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제 성적표는 객관적으로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2018년 7월에 한 차례 수정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2030년의 BAU(business as usual)<sup>2)</sup> 대비 37%를 줄인다는 기존의 총량 목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2030년 5억 3,600만 톤이라는 목표 배출량은 2010년 배출과 비교하면 실은 37%가 아니라 절대량으로 19% 감축에 불과하다. 한국판 그린뉴딜 역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응하는 사업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과 주요 부처의 정책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몇 퍼센트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지 추산조차 되지 않고 있다.

1)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하여 제출하는 목표를 말하며 흔히 ‘자발적 감축 목표’로 번역된다. NDC는 일단 2030년까지의 단기 감축 목표에 해당하며 5년 단위로 검토 및 상향이 요청된다. NDC에는 티핑포인트를 좌우하는 장기적인 목표가 부재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작성과 제출이 주문된 것이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인 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로, 2050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주요 방법을 포함한다.

2) 배출전망치, 즉 현 정책이 변하지 않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경우의 전망치를 말한다.

---

2021년 4월, 온라인으로 열린 기후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연내 상향하겠다고 처음 밝혔고, 공적 금융기관은 해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NDC 상향치의 구체적인 수준은 제시되지 않았고, 이미 투자된 석탄발전소 부분은 제외된 것이어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확인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선언보다, 10년 뒤인 2030년까지 2010년 배출량 대비 50% 이상 감축과 같이 국제 사회의 책임에 부합하는 명시적 목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최근 중요한 동향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이다. 2021년 5월 말, 서울에서 개최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직전에 한국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을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기존 녹색성장위원회와 국가기후환경회의를 통합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맡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산업, 에너지, 연구개발(R&D)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당연직 참가위원인 각 부처 장관 외에 77명의 민간위원 등을 포함해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Just Transition),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등 8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범 직후부터 석탄화력발전과 내연기관자동차 중단 시점 결정, NDC 상향 등 중요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법령에 따른 근거가 없고 따라서 권한과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그리고 위원들 다수가 기존에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에 관여했던 인사들인 탓에,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과감한 녹색 전환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 03

에너지 민주주의와  
시민참여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시민<sup>3)</sup>의 참여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에서 이런 에너지 시민의 참여를 경험한 가장 최근의 계기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였다. 하지만, 이 과정과 결과가 에너지 민주주의의 증진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이른바 찬핵 진영에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인 공론화위원과 시민참여단이 결정하게 해선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탈핵 진영에서는 시민 참여의 의의는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과 절차는 매우 부적절하고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부적절함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후퇴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하는 공사의 중단과 취소라는 정책 집행상의 문제를 단기적인 시민 토론과 여론조사를 통하여 해결하려 한 의도에서 비롯했다. 산업부는 공사 중단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성에 따른 시간적 압박 속에서 3개월 이상의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고, 속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2박 3일의 합숙으로 대체되었다. 둘째로는 방식의 부적절함이 지적된다. 공론조사라는 방법은 유전자조작 식품의 안전성, 동물실험의 허용, 신기술의 적용 등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한 정보와 논리가 개입되어 있는 주제에 대하여 적용되며, 찬반이 아닌 개방적인 권고가 결론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과 재개라는 양자택일만이 가능했던 지난 공론화 과정은 공론조사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론조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남겼다. 셋째로는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다. 시민들은 참여보다는 심사단의 역할에 머물렀고, 찬핵과 반핵 진영 사이의 가용 자원과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형식적 중립성에 치중한 정부의 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시비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해 무엇보다 핵발전 문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정치와 언론의 주요 의제가 되었고, 쟁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했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불안전하고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속의 민주주의 자체가 사람들의

3) 에너지 시민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낮은 구제제를 무너트리고 현대 민주주의를 만들었고 이들이 주역이 되는 시민사회가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고 있듯이, 에너지의 생산과 이용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민주주의의 영역을 에너지 정책과 체제로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하는 가상의, 또는 잠재적인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다.

---

입에 오르내리고, 정책 결정과 갈등 해결 방식으로 실험된 것 자체의 성과도 부인해선 안 될 것이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활동도 에너지 민주주의 시각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사례다. 지난 8월 초에는 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이 공개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라는 이름의 공론화 기구가 발족했다. 그러나 시나리오의 1, 2안 뿐 아니라 탄소중립을 산술적으로 가능하게 한 3안조차 30년 뒤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고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핵심 이유는 이 시나리오들이 2050년까지 특히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가 지금과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화석연료 수요의 대부분을 전기화하고 효율화하지만, 탄소중립을 이루기에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CCUS<sup>4)</sup>, 산림흡수원, 수소 이용 같은 장담할 수 없는 기술적 요소들을 투입해 만든 것이다. 탄소중립 시민회의에 참여한 시민들이 충분한 온실가스 감축을 담보할 수 없는 제한된 세 가지 시나리오만을 제공받고 선택을 압박당하게 된다면 이는 오히려 에너지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

4) 탄소 포집과 활용(CCU: Carbon Capture&Utilization) 기술과 탄소 포집과 저장(CCS: Carbon Capture&Storage) 기술을 합쳐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다른 산업 원료로 활용하거나 깊은 바다와 땅 속에 저장하는 방법 등이 있다. 화석연료 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더라도 대기로 배출되지 않도록 격리하여 온실효과를 방지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이다. 그러나 완전한 포집과 저장이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점,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경제성 확보 시점을 알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환경 파괴 등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기후정의 운동 진영에서는 CCUS가 온실가스 감축의 솔루션이 되어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 04

## 한국 정부 정책의 한계와 에너지 민주주의의 과제

최근 들어 한국에서 경제성장에 대비하여 자원 사용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개별 환경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탄소중립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정책은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이행 수단이 부족하고, 실제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신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 중심의 성장 정책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무엇보다 기존 에너지 다소비, 수출중심 경제 구조의 중장기적 전환 없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를 단순하게 덧붙였기 때문이다.

경제성장과 대기업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정부 부처들이 환경 관련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입지를 갖는 것, 정부 부처와 기구들 사이의 정책 통합성이 취약한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연결성이 미약한 것도 에너지 정치의 자리 찾기에서 점검되어야 할 측면들이다.

또한 한국의 정치 구조상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도 중요한 문제다.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임기 중에 확실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정책에 치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2050년을 바라보며 불확실한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장기적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전환에 큰 힘을 기울이기 어렵다. 국회 역시 개발과 성장을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이 주도하며, 이를 견제하는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의 정치력도 미약한 형편이다. 2020년 9월에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특별 결의'가 모든 국회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그해 말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 할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당과 제1야당에 의해 통과된 것은 한국 에너지 정치와 탄소중립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한국 기후 정책의 가장 큰 약점은 국민과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의 엄중함과 도전의 필요불가결성을 전달하기보다는 새로운 성장과 이윤의 기회임을 부각하며, 국민과 기업이 거의 아무런 부담도 질 필요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이나 탄소세 도입 같은 어려운 과제들은 현 정부에서 다루지 않고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의 입장에 머무르고 정책을 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조건에서 에너지 시민으로서의 반응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이 극복되려면 시민과 정부 모두 단지 몇 가지 기술이나 제도에 국한되지 않는 에너지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기초 체력은 우리가 에너지와 기후의 문제를 풍부하게 읽어내고 느낌으로써 우리의 삶과 사회 그리고 지금과 미래를 폭넓게 볼

---

수 있는 시각을 말한다. 이를 ‘에너지 문해력’ 그리고 ‘기후 문해력’이라 부를 수도 있겠다. 문해력이 갖춰지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을 들여다보고 우리와 환경, 우리와 다른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지금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비판을 회피하는 대신에 책임 있는 대안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된다. 문해력과 공감력이 갖춰지면 이행의 수단과 속도는 서로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가르는 정말 중요한 것을 다루고 해결하는 에너지 민주주의, 기후 민주주의로 민주주의의 내포가 깊어지고 외연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전환 역시 현실 정치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봄의 차기 대통령선거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전 사회와 정치권의 진지한 이슈가 되고, 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의 통합성과 연속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세부 과제가 분명히 동의되고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IPCC<sup>5)</sup>가 제시한 지구온난화 1.5도 목표에 부응하는 NDC의 가시적 상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신규석탄화력 프로젝트의 철회, 신공항 프로젝트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온실가스 다배출 부문이 지속될 수 없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어야 한다. 셋째, 재생가능에너지 확충,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 확충,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등 경제의 녹색전환과 녹색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문의 사업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의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정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 에너지 요금 현실화, 탈핵을 뒷받침할 입법 등의 중요한 과제들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 사회, 정치권, 지역, 기업, 노동자에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전망과 이에 따른 이익과 피해에 관한 정직한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 에너지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당연하고 정치권이 이에 반응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의 요체다. 한국 사회와 정치가 미루어둔 숙제가 많은 만큼, 더욱 빠르고 밀도 있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가 궤도에 올라야 할 것이다.

---

5)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함께 1988년에 창립한 기구로, 각국의 기상학자, 해양학자, 빙하 전문가, 경제학자 등 3천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IPCC가 발간하는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는 유엔과 각국의 기후 정책의 근거가 된다.

#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민주주의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1년 8월 2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